
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

2017. 12.

관계기관 합동



목 차



I . 대부시장 현황	1
II . 현행 규제·감독 체계의 문제점	3
III . 중장기 감독체계 개편 방향	5
IV . 단기 감독 개선 방안	6
1. 금전 대부업	7
2. 대부중개업	11
3. 매입채권추심업	12
4. 감독체계 정비	13
V . 추진 일정	14

I. 대부시장 현황

- **(개요)** 주로 신용등급 7~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*를 대상으로 법정최고금리**에 가까운 고금리로 대출하는 시장

* 대부업 이용자 중 저신용자(7~10등급자) 비중(NICE, '16.12말) : 76.7%

** 대부업 평균금리('16말) : (신용대출) 25.0%, (담보대출) 16.0%

-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순기능과 함께,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할 가능성*도 큰 양면적 시장

* 대부 이용자는 다른 자금유통수단이 거의 없어 대출 가능 여부가 중요하고, 금리 등 구체적 대부조건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대응이 취약

- **(시장구조)** '16년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 규모는 14.6조원이며, '16년 중 신규 대부 실행액은 8조원 수준*으로 추정

* NICE 기준(시장의 약90%) '16년 중 대출 실행 규모 : 75,963억원, 114.2만건

- 신규대부액의 약 1/3인 2.7조원*이 대부중개업자를 경유

* '16년 중 대부중개업자의 직접 중개 규모 : 27,135억원, 35.6만 건

-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대부업자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연간 부실채권 매입액은 약 2.7조원 규모로 추정

* 주요 대부업자(상위 40개) 채권 매각규모('16년~'17.6월) : 원금기준 9,232억원

* '16년 중 금융권(→ 대부업체) 채권 매각 규모 : 21,126억원

< 대부시장 거래 구조 >



□ **(공급자 현황)** 최고금리 인하 지속에 따른 경쟁 격화로 비용 구조가 양호한 전국 규모의 대형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*

*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자 수 : ('10말) 100 → ('13말) 144 → ('16말) 187

- 대형 대부업자들은 그 동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영업 확대* 등으로 대응

* 1인당 대출잔액(백만원) : ('14.12말) 4.5 → ('15.12말) 4.9 → ('16.12말) 5.9

- 한편, TV광고규제('15.8월)로 대부업자의 자체 영업채널이 일정 부분 제한됨에 따라 대부중개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

* 대부중개액(다단계 포함) : ('15.상) 2.3조원 → ('16.하) 4.6조원(100%↑)

□ **(피해 현황)** 과도한 추심, 무분별한 대출 유도, 허위·과장 설명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

- 과도한 추심에 따른 피해 사례*가 가장 많은 가운데, 설명 누락 등 무분별한 대출 유도** 행위도 주요 사례로 집계

* 금감원 민원(총 2,923건) 사유 중 과잉추심이 50.8%(1위), 고금리 대출 7.1%(2위)

** (피해사례) 3개월 후 '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'을 허위로 약속
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고액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유도

- 특히, 대출 유도 피해의 상당수가 중개업자의 허위·과장 설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

-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의무에 대한 설명을 누락·축소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

* (피해사례)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기망
일정기간 이후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된다고 허위로 설명

⇒ 최근 최고금리 인하, 추심 규제 강화 등 대부시장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대부업계는 중개·대출영업 확대로 대응할 전망

- 이에 따라 고금리 대부를 이용하는 저신용·저소득 취약 계층의 피해우려도 증가하는 상황

II. 현행 규제·감독 체계의 문제점

1. 금전 대부업 :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 미흡

- (영업 단계) 방송광고 시간제한 및 내용심의에도 불구하고 쉬운 대출을 원하는 대부 방송광고의 과도한 송출이 계속 문제로 지적

* 대부업법(§18의3)에 따라 대부협회가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 운영 중
→ 법령 위반 여부 위주의 소극적 심의에 그치는 측면

- 또한, 일부 대형 대부업자는 캐피탈 등 타업권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조달 및 영업확대 창구로 우회 활용할 가능성

- (심사 단계) 소액 대출시의 소득·채무 확인의무 면제조항*을 활용하여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추세

* 차주 변제능력심사를 위해 소득·채무 확인 의무 → 300만원 이하 대출시 면제(법§7 등)

- 전체 대출의 61%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되고, 신용평가시스템(CSS)을 도입한 대부업자도 소수에 그치는 실정

- (설명·계약 단계) 채무자의 취약한 금융지식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선택을 유도할 위험이 상존

* (그간 사례) ❶ 고객 유치 및 대부 유도 목적의 '30일 무이자' 상품('16년)
❷ 채무자 사정과 무관하게 이자수익이 극대화되는 장기계약 유도

- 또한, 일부 대부업자는 효과적 채권회수수단인 연대보증을 적극 활용 → 설명 미이행 등에 따른 피해가 지속 발생

* 금감원 민원(총 2,923건) 사유 중 4.3%(추심, 고금리 대출에 이어 3위)

※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이미 실질적으로 폐지 단계

- (회수 단계) 채무조정(신복위)* 협약 가입 저조 등으로 금융권의 채무조정에 무임승차하고 추심영업에 있어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

* '16년말 기준, 등록 대부업체 8,654개 중 협약 가입기관은 728개 수준

2. 대부중개업 :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지속

- (규제 미비) 광고 및 수수료 수취*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위험도 점증

* 수수료율 상한(5%), 소비자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등

- (시장 질서) 대부중개시장의 ①중개 재위탁, ②다중중개 관행으로 거래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

* ①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다른 중개업자에 재위탁(다단계)
② 대부중개업자가 다수의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업무 수행

- 이에 따라, 중개 재위탁(다단계 중개), 다중중개 등이 금지되는 금융권의 대출모집 시장과 달리 피해자 구제 등이 곤란

3. 매입추심업 : 불건전 업자 난립 우려

- (진입 규제) '16.7월 매입채권추심업 감독 강화 당시 설정된 진입장벽이 낮아* 불건전한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·이탈 우려

* 매입채권추심업 자기자본 3억원 ↔ 유사영업인 신정법상 채권추심업 자본금 30억원

** '16.7월 ~ '17.9월까지 482개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대량으로 신규 등록

- (규제 실효성) 최근 제정된 추심·매각업무에 대한 행정지도*가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과 점검 강화 필요

* 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」('16.11월) 및 「대출채권매각 가이드라인」('17.4월)

◇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규제·감독 강화 필요

- 중장기적으로는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권 수준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감독체계 개편
- 단기적으로는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

Ⅲ. 중장기 감독체계 개편 방향

◆ “동일 기능 동일 규제” 원칙에 따라 대부업자의 금융기능 (대출·중개·추심)별로 감독체계를 개편

① **(대출)** 전문적 대부업체(금융위 등록*/법인 위주)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되, 신용인프라 참여(신용정보 집중) 등 책임성 확보

* 금융위 등록대상은 시장 및 검사역량 확보 상황 등을 보아가며 확대

○ 책임성 확보 추이를 보아가며 자금조달규제 완화 등도 검토

○ 한편, 영세 대부업자(지자체 등록/개인 위주)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되, 업무 제한 등 영업범위 차등화* 추진

* 예시 : 대출 외 영업(예 어음 인수 등) 제한 등록 사도외 영업 금지, 대부 규모 제한 등

② **(중개)**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법상의 대출상품 중개업자로 일원화

*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법 시행시, 원칙적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해 상품판매시 적합성·적정성 원칙 준수,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규제 적용 예정

③ **(추심)** 유사 업종인 신정법상 채권추심업 수준의 규제를 도입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(가칭)채권회수관리업으로 단일 업종화

< 중장기 대부 감독체계 개편 방향 >



※ 중장기적으로 대출·중개·추심 영업간 겹업을 해소하여 감독 실효성 제고

IV. 단기 감독 개선 방안

< 추진 방향 >

◆ 감독체계 개편의 첫단계로,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

- ① (금전대부업)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
- ② (대부중개업)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
- ③ (매입추심업)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,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 감독체계 구축

< 대부시장 영업행위 개괄 >



< 대부 업종별 감독 강화 방안 >

대부중개업	금전대부업	매입채권추심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개수수료 인하 ■ 허위·과장중개 금지 ■ 시장규율 확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광고) 광고규제 강화 ■ (심사) 상환능력평가 개선 ■ (설명·계약) 연대보증 폐지 상품설명 강화 ■ (회수) 채무조정 활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진입규제 강화 ■ 규제 실효성 제고 ■ 집중 검사

※ 감독 강화에 따른 제재규정 정비, 감독당국 역량 확충 등 감독체계 정비 병행

1 금전 대부업

◆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

가. 영업 단계 :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

* 국회 차원의 방송광고 금지 등 대부업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현행 법규 및 자율규제 체계 내에서 추진

① (광고규제 강화) 방송광고를 감축된 수준으로 유지*할 수 있도록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, 광고의 집중 노출도 제한**

* '17년 하반기 중 방송광고 총량 30% 감축 시행 중 → '18년 이후 증가 억제

** 2회 연속광고 금지, 주요 시간대(22~24시) 노출 비중 제한(예 : 일일 총량의 30%)

○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고 소비자 속고를 유도하는 정보를 확대하는 등 광고 내용상의 심의도 강화

·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 금지

* ① 편의성의 과도한 강조 : '당장', '빨리', '단박에', '300만원 이하 무서류' 등

②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특정 집단 우대 : '여자니까 쉽게' 등

· 소비자의 속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기재

* ① 주요 대출거절 요건, ② 연체시 추심 위험 등

· 과도한 차입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문구는 반드시 음성 표현

○ 총량관리, 집중노출 제한 등 강화된 방송광고 규제를 TV 등 방송매체뿐 아니라 IPTV매체까지 확대 적용(협회 규정 개정)

② (제재 강화) 규제 미준수시 협회의 제재금 부과를 강행 규정화*하고,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(500만원 → 예 : 5,000만원)

* (현행) 제재금 부과는 협회 재량사항 → (개선) 협회의 부과 의무

○ 제재 내역은 대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

나. 심사 단계 :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
평가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

① (특례 폐지) '상환능력 없는 곳에 대출도 할 수 없도록',
소득·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(현행 300만원)

- 피해 우려가 큰 청년층(예 : 29세↓)과 고령층(65세↑)에 대해
소득·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
- 그 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전문화 추이, 청년·고령층
대출에 대한 규제 효과 등을 보아가며 폐지 범위 확대

② (상환능력 확인)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대출심사시
채무자 신용조회 의무화

- 이를 통해 연체자, 채무조정·회생·파산 확정자 등 상환
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제한
- 제도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일정규모 이상의 지자체
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적용

③ (상환능력 평가) 시장 점유율이 높고 전문화된 대형 대부
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(CSS) 도입 지도

- (1단계) 상위 10개 업자*에 대해 도입(~'18년)

*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전문적 업체

* '16.12말 현재 시장 점유율 56.7%, 평균 자산규모 9,097억원

- 독자적 CSS 구축 역량이 부족한 대부업자가 있을 수 있는
점을 감안, 대부협회·CB사 등을 통해 표준 CSS 구축·제공

- (2단계) 대부규모 1,000억원 이상 대부업자*까지 확대(~'19년)

* '16.12말 현재 22개 업체이며, 시장 점유율 71.0%, 평균 자산규모 5,393억원

④ (금리인하요구권) 대부업자의 CSS 도입 추이 등을 보아가며
대형 대부업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

다. 설명·계약 단계 :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

① (약관 심사)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^{*}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대부약관 심사권 도입

* (예) ①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상환액의 150%에 해당하는 어음 발행
② 최고금리 인하 회피 차원의 '만기 자동연장' 약관 조항 등

○ 신규 약관 제정시와 중요사항 변경시(기한의 이익 상실요건, 만기연장요건 등) 사전보고 및 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

② (상품설명 강화) 대부이용자가 대출 유형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도록 설명서를 통한 설명의무 부과

* (설명사항) 만기별, 상환방식(분할/일시상환)별 ①총 상환액 ②상환주기별 정기적 납입액, ③연체 등 발생시 비용 및 법률관계상 불이익 안내

○ 특히, 대부업자가 최고금리 인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 대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상환비용 등 관련 정보 제공 확충

※ 상품설명서 문구 및 이용자 확인 사항 예시

① 대출만기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, 설명을 토대로 (3년)의 만기에 동의하였습니다. ☒

② 분할상환시보다 만기일시상환시 총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, 설명을 토대로 (분할상환) 변제방식에 동의하였습니다. ☒

③ (연대보증 폐지)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행정 지도로 폐지 (기존 보증분은 자율적 감축 유도)

○ 다만, 서민 자금이용의 급격한 위축 우려, 금융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외^{*}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

* (예시) ① 법인대표 등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연대보증 ② 자기신용으로 자금이용이 어려운 저소득·저신용층의 병원비, 장례비 등 긴급자금

-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연대보증 입보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, 서면동의 징구 등 준수절차를 명확화

※ 설명의무 강화 및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행정지도로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도입* 후 이행 추이를 보아가며 법제화 추진

* 금융권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로 연대보증 폐지 (은행 '12.9월~, 제2금융권 '13.7월~)

라. 회수단계 : 대출채권이 부실화된 경우 대부업자도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부담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강화

□ (채권 관리)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자 자체 채무조정 및 채권 매각요건 내규화 등 체계적인 채권관리 지도

□ (채무조정) 대부업자가 채무조정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신복위 협약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

- 현재 서민금융법에 규정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복위 협약 가입 의무를 등록 요건으로 신설

- 신복위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 조정(예: 현행 1천만원 → 5천만원)

마. 타업권 연계 제한 : 대부업자가 캐피탈 등 타업권과 연계 하여 고금리 대출영업을 확대하지 않도록 대출·진입규제 정비

□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

* (예시) 대출비중 제한(총자산의 30%) 대상에 대부업체로의 대출 포함 등

□ 대형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·인수하는 경우, 직접설립·인수시와 동일한 요건 적용*을 통해 우회진입 방지

*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(대부업 폐쇄 등)

2 대부중개업

◆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

□ **(중개수수료 인하)** 그간 최고금리 인하('13년 39% → '18년 24%)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추이를 반영하여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

* 현행 : (5백만원 이하) 5%, (5백만원~1천만원) 4%, (1천만원~) 3%
개선(예시) : (5백만원 이하) 4%, (5백만원~) 3%

□ **(허위·과장 설명 금지)** 허위·과장 설명 등* 주요 불건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

* (예) ❶ 저리대출로의 대환 약속 후 고리대출 중개 ❷ 연대보증시 보증인에게 설명 누락 또는 기망 ❸ 과잉대부 금지규제 회피목적의 대출액 분할 중개 등

○ 위반시 감독당국의 영업정지·과태료 등 제재근거도 정비

□ **(시장규율 확립)** 대부중개업자의 다단계 중개와 다중중개 금지를 통해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준의 시장 규율을 정착

❶ **(다단계위탁 금지)**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재위탁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화

❷ **(다중중개 금지)** 1사 전속주의 도입을 통해 대출분할 중개 등 불건전 행위 차단

❸ **(중개이력 관리)** 중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개 법인 소속 직원 등록제* 및 중개 이력관리 체계** 구축

* (중개직원 등록제)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중개법인 소속 직원을 등록·관리

** (중개이력 관리제) 중개업자는 업무수탁자인 금전대부업자에게 중개업무 담당자의 실명, 등록번호 및 설명의무 준수 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빙

※ 법제화까지의 기간을 감안, 허위·과장 설명 금지 및 시장 규율 확립 관련 사항은 「대부중개업무 모범규준」을 마련하여 행정지도

*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업무 위탁을 금지

3 매입채권추심업

◆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,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을 가능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 감독체계 구축

□ (진입규제) 소비자보호 역량과 영업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진입규제를 순차적으로 강화

① (재무요건) 자기자본 요건 상향(3억원 → 10억원)

② (인적요건) 최소 인력 요건 신설(예 : 상시인원 5명)

□ (영업규제) 채권매각·추심업무 관련 행정지도* 실효성을 제고

* 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」 및 「대출채권매각 가이드라인」

①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* 수립을 의무화하고 매각·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을 포함

* 대부업법에 따라 도입하여야 하는 「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」(법 §9조7 등)
· 현행 자산 500억 이상 업체만 도입 의무 → 매입채권추심업자까지 확대

② 과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

□ (재진입규제) 무분별한 등록 이탈에 따른 감독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 확대(1년 → 3년)

* (현행 금지기간) 등록취소시 5년, 자진폐업시 1년간 재등록 금지

○ 폐업시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, 채권 대량 매입 후 폐업하는 방식의 변칙영업 차단

□ (집중 검사) 매입채권추심업자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채권매입 및 추심영업의 적정성을 집중점검(계속)

4 감독 체계 정비

◆ 감독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영업 기반을 확충

□ **(제재규정 정비)** 감독 강화사항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

① 신규 도입 규제를 미준수할 경우 제재근거 명확화

②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체계를 포괄부과에서 건별부과로 전환

* 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담액은 인상하고, ②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담액의 과도한 상승은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

□ **(당국역량 확충)** 감독 강화에 맞추어 금감원 및 시·도의 감독·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, 시·도와의 협업 활성화

* 시·도 관련 사항은 담당 부처인 행자부 및 시·도지사 등과 협의 하에 추진

○ 금감원 인력 확충 추이를 보아가며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('18년중 자산 120억원 이상 → 자산 100억원 이상)

□ **(협회기능 강화)** 법정기구인 대부협회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자율규제 기능 강화

○ 대부협회의 업무에 업무방법 표준화*, 종사자의 전문성 및 준법의식 함양, 업계 공동사업 추진 등을 추가·보완

* 법령상의 규제를 보완하여 대출·중개·추심업무상 준수사항을 구체화·표준화

○ 대부협회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면밀히 감독 ('16년부터 협회 감독권 신설)

□ **(종사자 준법역량 제고)** 대부업 등록요건인 대부업체 임직원의 교육 이수 의무 확대*를 통해 대부업계의 준법 역량 제고

* (현행) 대표이사과 업무총괄사용인(지점장)에 대해 8시간 →

(개선 예시) 업무총괄사용인 및 임직원 총원의 10% 이상에 대해 12시간

○ 대출·중개·추심의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수과정 세분화

V. 추진일정

추진과제	조치내용	일정
1. 금전대부업		
가. 영업 단계	· 광고규제 관련 대부협회 규정 개정	'18.1Q
나. 심사 단계	·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* 소득·채무서류 증빙 면제 축소 등	'18.2Q
	· 대형사 CSS 도입 지도	'18년 중
다. 설명·계약 단계	· 약관 심사권 도입 법령 개정	'18년 중
	· 상품설명 강화 및 연대보증 금지 행정지도 시행	'18.1Q
라. 회수 단계	· 서민생활지원법 개정	'18년 중
마. 타 업권 연계 제한	· 여전법령 등 개정	'18년 중
2. 대부중개업		
가. 중개수수료 인하	· 시행령 개정	'18.2Q
나. 허위·과장 설명 금지	· 법률 및 시행령 개정	'18년 중
다. 시장 규율 확립	· 다단계 위탁 금지 등 대부 중개모범규준 마련	'18.2Q
	· 대부협회 규정 정비 및 전산 등 준비	'18.2Q
3. 매입채권추심업		
가. 진입규제 강화	· 자본요건 상향 조정 관련 시행령 개정	'18.2Q
	· 인적요건 신설 관련 법률 개정	'18년 중
나. 영업규제 실효성 제고	· 협회 표준규정 도입	'18.2Q
	· 시행령 개정(내부통제기준)	'18.2Q
다. 재진입 규제	· 법률 개정	'18년 중
라. 집중 검사	· 채권추심업자대상 집중검사	지속 추진
4. 감독체계 정비		
가. 제재 규정 정비	·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	'18년 중
나. 당국 역량 확충	· 조직, 인력 정비	지속 추진
다. 협회 기능 강화	· 협회 업무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	'18.2Q
라. 종사자 준법역량 제고	· 법률 개정 및 교육내용 확충	'18년 중

※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진 일정 조정